

배포 일시 2025. 5. 27. (화)

담당자

즉시 보도 가능

진우성 사무국장 010-2017-0584

[기자회견] 청년본부 · 대학생본부,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정책제안식 진행

- 청년본부와 대학생본부, 전총협 정책제안식 공동 주관
- 전총협은 이번 행사에서 16개 대표 청년 정책 제안
- 앞으로도 청년과 대학생 목소리 경청하여 제도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

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(본부장 김동아)와 대학생본부(본부장 봉건우)는 5월 27일(화)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정책제안식을 진행했다.

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장인 김동아 국회의원과 봉건우 대학생본부장, 조영학 前 가천대학교 총학생회장, 김태현 前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각 대학 학생대표자 출신들이 참석했다.

전국총학생회협의회(이하 “전총협”)는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하는 연합조직으로, 청년과 대학생의 실질적 삶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청년본부, 대학생본부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.

전총협은 이번 행사에서 ‘청년 의료기사 직무 정체성 강화 및 제도개선’, ‘지방소멸 대응 청년 정착 프로그램’, ‘창작활동 이력 인증제 및

창의경력통장 도입’, ‘AI 4차산업혁명 대응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진입 지원 프로그램’ 등 16개 대표 정책을 제안했다.

한편, 김동아 청년본부장은 “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은 일을 꾸준히 경청하겠다”고 밝히며 “청년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의지를 밝혔다.

이어 봉건우 대학생본부장은 “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정책을 챙기는 것은 곧 우리나라 미래를 지키는 것”이라고 밝히며 “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각 대학 학생사회는 물론, 20대 전체와 연대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▲ 정책제안식 현장 사진

붙임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제안 정책 목록. 끝.

- 청년 의료기사 직무 정체성 강화 및 제도개선
 - 의료기사법 전면 개정 또는 별도 제정으로 청년 의료기사의 직무 혼선 해소 및 고용 안정성 확보
 - 청년세대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진입·정착할 수 있는 직역 기반 청년 특화 정책 추진

- 지역소멸 대응 청년 정착 프로그램
 - 지방대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지역 정착 지원 패키지 도입
 - 청년 귀향 시 공공임대 연계 및 취업 매칭 강화

- 청년 맞춤형 이행기 수당 및 사회안전망 강화
 - 구직·진입기 단계별 이행소득제 설계: 학업→진입→노동 단계 연계
 - ‘만 00세 이하 기본보장’ 개념 도입을 통한 청년특화 복지 기반 구축

- 공공주택 확대 및 청년 주거권 보호
 -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전 부채정보 공개 의무화 및 대항력 자동 부여
 - 역세권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청년 정책 연계형 공공주택 등 유형 다양화

- 청년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임대차 정보 알림·보호 시스템 구축
 - 전·월세 계약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근저당·소유권 이전 등 위험 정보를 실시간 알림하는 국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
 - 정보 비대칭 해소, 보증금 피해 예방, 공정한 임대차 시장 환경 조성 등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 인프라 제도화

- 창작활동 이력 인증제 및 ‘창의경력통장’ 도입
 - 창작·예술·디지털 콘텐츠 활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‘창작활동 이력 인증 시스템’ 과 포트폴리오 기반 디지털 경력증명서 도입
 - 청년 개인의 비정형 창작 활동을 체계화하여 민간 채용·지원사업 등에서 실질적 가산점 제공

- 비인기 창작 분야 대상 ‘실패 해금형’ R&D 펀드
 - 수익성 낮지만 사회·문화적 가치는 높은 장르(순수미술, 실험영화, 다언어문학 등)에 대해 ‘실패해도 용인되는 실험펀드’ 운영

- 도전 자체를 장려하는 구조를 통해 청년 창작의 ‘입구컷’ 문제 해결
- 비정형 창작 노동자의 건강·법률 지원 플랫폼
 - 프리랜서·크리에이터·디지털노마드 청년 대상 심리상담, 창작물 저작권 상담, 수입 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‘창작자 건강센터’ 설립
 -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창작자의 불안정성 완화 및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제공
- 대학생 AI 비서 도입
 - 시간표·장학금·졸업·취업 등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AI 챗봇 시스템을 대학 포털에 연동하여 맞춤형 학업·진로 컨설팅 제공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행정 부담 완화
- 대학(원)생 학업비 부담 완화 정책
 - 고등교육 재정 증액을 통한 대학(원)생 1인당 교육환경비용 대폭 증대
 - 저소득층의 학업 지원을 위한 대학원 국가장학금 제도 신설
- 청년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정책 실험 제도화
 - 총학생회 중심 청년 정책 실험 플랫폼 시범 운영 (서울·광역시 단위)
 - 청년위원회에 실질적 예산 집행권 및 정책제안권 부여
- AI·4차산업혁명 대응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진입 지원 프로그램
 - 지방대 및 지역 거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, 디지털 인재에게 지역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참여 기회 부여 및 일정 기간 이상 지역 근무 시 주거·이전비·장려금 패키지 지원
 - 청년 기술인재와 지역 중소기업·로컬스타트업 간 디지털 전환 파트너십 매칭 시스템 구축
- 청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
 - 공익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주도 프로젝트에 자금·공간·멘토링 지원
 - 지자체·기업 연계로 실무역량 강화 및 청년 공공활동 참여 활성화
- 초과학기생 학생예비군 편입 허용
 - 졸업 지연·취업 준비로 인한 초과학기생도 학생예비군 편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

○ 병역 의무 부담 완화와 학업 병행의 현실적 지원

□ 도심 청년마을 프로젝트

- 구도심의 민간 공실과 유휴 공공 부지를 청년의 주거·창업·생활 기반으로 전환하여,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재구성하는 국가 전략 필요
- 청년을 소비자가 아닌 도시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을 통해, 공간 정책이 곧 미래세대 정책이 되도록 함

□ 대학-학생 거버넌스 구조 확대

- 총장선출, 등록금, 학사제도, 복지 등 대학 운영 전반에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위원회에 학생위원 위촉 의무화 및 40% 이상 비율 확대
- 대학은 청년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라, 청년과 함께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어야 하며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임